

새로운 정책으로 해외직구 문 활짝 연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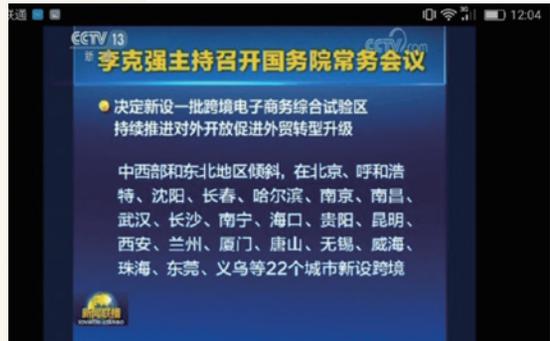
상하이지사

해외직구 정책 개선 및 범위 확대

- 지난 11월 21일에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수입정책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 해외직구 정책이 적용되는 도시도 22곳이 추가되며 북경, 심양, 남경, 무한, 서안, 샤먼 등 22개 도시에서 해외직구 종합 실험구를 새롭게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외직구 정책이 적용되어온 도시는 천진, 상해, 항주, 닝보, 정주, 광주, 심천, 충경, 복주, 평담, 합비, 칭두, 대련, 칭다오, 소주 등 15개 도시다.

<해외직구 수입상품 리스트> 상품에 대해 혜택 부여

-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상품은 수입화물로 취급해 종합세를 부과하는 한편 대다수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수요를 감안하여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기존의 2,000위안(약 32만 원)에서 5,000위안(약 8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1인당 연간 거래금액 한도도 2만 위안(약 325만 원)에서 2만6천 위안(약 422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이 금액은 재조정될 예정이다. 거래금액 한도 내 해외직구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 적용하고 수입 시 증치세와 소비세에 대해서는 법정 납세액의 70%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新22개 해외직구 종합실험 도시

가다로운 수출품, 해외직구형태 취하면 좋을듯

- 2018년 상반기 중국 해외직구 거래금액은 1조300억 위안(약 167조 원)에 달했으며, 2018년 연말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1조9천억 위안(약 30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장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기능성식품, 신식품(기존 식습관이 없는 식품) 등 중국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한 특수식품들에 대해 해외직구의 형태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개정한 정책에 힘입어 보다 수월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직구 방식은 최종 소비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는 중량(금액)을 검토해 포장 및 물류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